

# '한전 적자·물가·폭염'...전기요금 오를까

## 정부, 20일께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 국제 연료비 상승폭 고려하면 인상 불가피

정부와 한국전력이 조만간 발표 예정인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전의 재무 상황과 국제 연료비 인상 폭을 고려하면 대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분기별 조정단가가 설정된 데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있어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고물가 대응에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다.

7일 한전에 따르면 오는 16일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각각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제출한다. 이후 산업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20일께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보받게 된다.

한전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확실시된다. 연료비 연동제란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한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3원, 연간 기준 최대 ±5원에 그친다.

산업부의 원자재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15.7달러로 연초 대비 50.4% 뛰었다. 호주 뉴캐슬 전력용 연료탄 현물 가격은 지난 3월 기준 톤(t)당 411.6달러로 연초 대비 104.2% 급증했다. LNG 수입 가격은 지난 4월 t당 694.5달러로 연초와 비교하면 17.7%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80.15% 올랐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라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전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조3525억원 감소한

7조7869억원 적자였다.

국제 연료비 급등에도 연료 가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원가 부담이 높아지며 적자 폭이 깊어진 것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적자는 20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아울러 현재 한전은 회사채를 발행해 손실을 메우며 버티고 있는데, 연내 사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이런 대응도 어려워진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사채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한전의 누적 차입금은 지난해 말 39조1000억원에 달했는데, 올 들어 누적 차입금 규모는 지난 4월 말 기준 50조원을 넘은 상태다.

정부와 한전이 다양한 조치를 펼치고 있지만, 연료비 부담이 워낙 커, 전기요금 인상 없이 유의미한 적자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한전과 발전 자회사 등 11개 전력그룹사는 지난달 긴급 경영, 해외사업 구조조정, 부동산 매각, 출자 지분 매각 등 총 6조원대의 자구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최근 전력도매 가격(SMP) 상한제를 추진하며 한전의 적자 축소에 적극 나섰다. 산업부는 오는 13일까지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현 정부가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주의 원칙'을 강조해온 점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정부가 고물가 관리에 나선 상황에서 대폭적인 연료비 조정단가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물가와 폭염도 전기요금을 인상하는데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소비자 물가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빠르게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9월(5.1%) 이후 13년 8개월 만인 지난 5월(5.4%) 물가 상승률은 5%대에 진입했다. 아울러 여름철 전력 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요금을 조정하면 체감하는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 /뉴스1

# 화물연대 파업에 주류업계 '비상'

## 하이트진로, 평소 공급물량 3~40% 감소

### 오비·롯데칠성, 배송지연 막기 위해 대응책 고심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며 주류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여름 성수기를 맞아 소주와 맥주 유통이 급감하며 '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7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이 3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한 이후 하이트진로 이전·청주공장에서 총 26차례 파업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회차 시 공병 운임 70% 공회전 비용 제공,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하이트진로 이전공장 진입 및 도로 점거를 시도해 생산라인 가동이 멈추기도 했다. 화물차주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화물차주들은 이전공장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속 인력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지난 3일에는 공장을 재가동했지만 파업에 가담한 화물차주들이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나가는 길을 점거한 상태로 동묘 화물차주 배송을 방해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임 인상 ▲지입제 폐지 등을 관철시

킬 계획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이슬과 진로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 65% 이상을 기록 중인 하이트진로의 소주 생산량과 출고량이 동반 감소할 경우 전국적으로 '소주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류 회사 거래선인 도매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 경우 편의점, 대형마트, 음식점 등에서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연쇄 파업'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 업체들의 경우 주류 공급 감소로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하이트진로 이전공장과 청주공장 등에서 참이슬과 진로의 소주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화물차주 파업으로 인해 지난달 중순 이후 일 평균 출고량이 평소 대비 60% 정도에 그친다.

오비맥주도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하이트진로와 마찬가지로 이전과 청주에 각각 공장을 가동 중인데 위탁 운송업체 기사 중 화물연대 조합원이 상당수에 달한다.

롯데칠성음료도 강릉, 군산, 충주에서 각각 소주와 청주,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아직은 전국 배송에 큰 영향이 없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배송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1

# 한전KDN 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

## 내달 8일까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한전KDN이 국민 참여경영 강화를 위해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한전KDN은 '2022년도 한전KDN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정책 이행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와 아이디어 제안서는 한전KDN 누리집(www.kdn.com)과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공모는 '한전KDN 4대 주요 의제', '전력분야 디지털전환', '친환경 경영(탄소중립)', '적극행정·공공서비스 혁신·효율화'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된다.

한전KDN은 특히 2030중장기 경영전략의 4대 주요 의제인 '에너지 ICT 플랫폼, Data Cloud, 기간통신 사업'을 통한 에너지ICT 주도권 확

보와 관련된 새로운 역할과 사업 아이디어, 친환경 경영, 적극행정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모은다.

접수된 국민 아이디어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1차 선정 후 한전KDN 직원이 구체화하는 직원 해커톤 대회를 거쳐 9월 말에 총 6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종합 검토 후 한전KDN 경영혁신과 신규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민 참여형 혁신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한전KDN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2 국가신산업 경영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2022년도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이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지호 기자

# 광양만권경제청, 2021사업체 실태조사

## GFEZ 입주사업체 경영실태 및 산업구조 현황 파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권경제청)에서는 한국개발조합 연구소와 공동으로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GFEZ 내 입주사업체 700여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21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및 1인 이상 외국인투자 기업이며, 고용·매출·생산·투자 및 애로사항 등 64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현장방문해 표본과 면담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자기기업식 조사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8월말에 공표 예정이며, 광양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

인할 수 있다.

앞서 2020년 기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GFEZ 입주사업체는 701개이며, 1만7000여 명이 고용, 매출액 8조9929억 원·생산액 4조1077억 원을 달성했다.

광양만권경제청 관계자는 "관내 입주사업체의 적극적인 조사 협조와 응답 부탁드리며, 본 조사 결과는 행정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조준익 기자



서울 푸드 2022 개막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 푸드 2022)가 개막한 7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 필리핀 부스에서 관계자들이 필리핀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등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

# '코로나 이후' 광주 고용시장 회복 더디다...디커플링 현상

## 광주 고용회복률 전국 평균 밑돌아·전남 다소 개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광주지역의 고용시장 회복력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서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고용상황은 다소 개선됐으나 특정 부문에 집중되는 등 광주·전남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김대운 과장)이 내놓은 '광주·전남 고용시장 회복력 평가 및 주요 특징'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취업자수 증감을 팬데믹 이전(2018년 1월~2020년 1월)과 이후(2020년 2월~2022년 4월)로 구분

해 비교한 결과 코로나 발생 이후 광주지역 월평균 취업자수는 74만 6000여명으로 코로나 이전의 99.4%에 그친 반면, 전남(98만3000명)은 101.5%를 기록했다.

광주는 전국 평균 100.8%, 특·광역시 평균 101.7%에 크게 못미쳐, 타지역의 고용시장 개선흐름과는 탈동조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국 공역시 취업자수가 2021년 이후 점진적 증가 흐름을 보인 것과는 달리 광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광주의 고용회복 부진 원인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고용복원이 더딘 데다 제조업 부문에서 팬데믹에 따른 고용충격이 가장 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대면서비스업인 도소매·음식숙박업도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광주지역의 성별 고용복원력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2021년 이후 여성의 고용상황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의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수준이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 최대 36%까지 감소했다가 점차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전남의 고용 회복력(101.5%)이 전국 평균(100.8%)과 엇비슷하고 도 단위 평균(99.6%)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남의 고용시장 복원은 누적 피해가 컸던 코로나 취업준비생과 청년층의 고용회복이 가장 컸기 때문으로 /권형안 기자

# 상속·이사로 2주택자...1주택 중부세 혜택 받는다

## 고령자·장기보유 혜택...기본공제 6억→11억

정부가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중부세) 계산 시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이나 이사로 1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중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배제돼 중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상속주택을 부여받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으며 최대 80%에 달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부부 각각 6억씩 12억원 공제받는 방법과 1주택자로 11억원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또한 올해 중부세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춘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정부 대책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월 중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등은 2년, 기타 지역은 3년간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사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중부세도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해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 수출컨소시업과 같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금융상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에서 금리 우대와 함께 외국환거래 시 환율 및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 해외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라쿠텐, 쇼피 등) 입점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KOTRA가 제공하는 수출전문가와 1:1 컨설팅, 128개 해외무역관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 광양제철, 전기설비 정비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광양제철소가 고압차단기 원격 인출 장비를 도입하고 전기설비 정비 작업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각 공장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기설비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고 전원 공급을 중지해야 한다. 이때, 접촉 부분에 비정상적인 분리·결합 및 손상 등이 발생하면 아크 폭발로 이어져 수작업 시, 화상 또는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광양제철소 설비부와 EIC 기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업자가 직접 손대지 않고 고고 고압의 충전부와 연결 커넥터를 분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장비를 사용하면 태블릿 PC와 실시간 감시 카메라 영상 등을 바탕으로 5~10m 떨어진 거리에서 차단기의 인출·인입 및 작업 이동거리 확인 등이 가능해져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광양=조준익 기자